

식품기업 인재 양성… ‘푸드테크 계약학과’ 4곳 신규 선정

식품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푸드테크 계약학과’가 올해 지방 거점대학 4곳에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푸드테크 분야 중소식품 기업의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기존 4개소에서 8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기술·생명공학·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등이 결합된 신산업으로,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대학이 산업체 등과 계약해 산업체 맞춤형 학과를 신설하는 제도다.

앞서 2020년 식품기업의 요구로 식품기업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한양대(서울)와 고려대(세종)에 각각 ‘기능성식품 계약학과’를 개설했고, 2021년 서울대와 경희대에 각각 푸드테크 계약학과와 미래식품 계약학과가 추

농식품부, 4개소→8개소
지방거점 대학으로 확대
기존 석사서 학사까지 지원

신규 참여대학 내달 22일까지 모집
학교엔 운영비, 학생엔 등록금 지원

가로 개설됐다.

현재까지 4개 대학에서 석사과정으로 운영 중인데, 농식품부는 현재 수도권 대학에 편중된 계약학과를 지방 거점 대학으로 확대해 지역 중소식품기업의 푸드테크 산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석사과정만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학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22일까지 신규 4개 대학 모집을 공고 중이며, 응모 대상은 고등교육법 상 산업대와 전문대를 제외한 일반대학으로, 올해 하반기(9월~) 푸드테크 분야 석사 또는 학사(3학년 편입)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계약학과 운영대학에는 학기당 3500

만원 내외의 학과운영비가 지원되고,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65%가 지원된다. 또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수행비로 연간 약 6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푸드테크 계약학과 사업설명회를 개최, 참여 희망대학

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사업계획서 작성법,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알릴 예정이다.

선정평가는 현장조사와 서류·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해 이뤄지며, 식품 관련 기업의 교육수요 반영 여부, 대학 입지와 교원 및 시설 기준,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용이성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사업 공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공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중소식품업체의 푸드테크 산업 참여 유도를 위해 2027년까지 계약학과를 12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대학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조업 회복에 한파까지… 연휴 직후 전력수요 급증 전망

산업부, 전력수급 관리상황 점검
박일준 2차관 중부변전소 등 방문
발전설비 불시고장 가능성 요주의

설 연휴 직후 산업 생산설비 가동에 다급작스러운 한파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이 24일 서울북한발전소와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력수요는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사이 큰 변동성을 보인다. 작년 12월 4~5주차에는 한파와 폭설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인 94.5기가와트(GW)를 기록한 반면, 1월 1~2주차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며 85GW 내외를 유지했다.

설 연휴 기간은 조업을 하려므로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지만, 설 연휴가 끝



서울시가 올 겨울 처음으로 한파 수도계량기 ‘동파 심각’ 단계를 발령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가압장에서 직원이 동파된 계량기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시스

나는 25일부터는 조업을 회복과 함께 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로 전력수요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연휴 이후 전력수요는 연휴 마지막날 63.8G

W, 연휴 후 첫째날 78.8GW, 연휴 후 둘째날 82.6GW, 연휴 후 셋째날 87.4GW로 높아졌다. 이는 조업을 회복에 의한 영향으로, 올해 설 마지막날부터 몰아친 한파 영향으로 전력수요 급증은

지난해보다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과 일상 업무에 복귀하는 25일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고, 바람도 강해 체감 기온은 더 낮아 춥겠다. 이에 역대 최대전력을 기록한 작년 12월에 이어 설 연휴 이후 또다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5일 오전은 큰 폭의 전력수요 상승과 함께 설 연휴 정지 상태였던 다수의 발전설비가 재가동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불시고장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차관은 이날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수일 이상 정지상태였던 발전설비가 재가동하는 시점에 불시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아”며 “전력 유관기관은 발전설비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력거래소도 설 연휴 수급대책과 올 겨울철 마지막 한파에 대비해 긴급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 26일까지 경영진 주관 일일 수급상황 점검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기관장 및 경영진이 중앙전력관제센터를 현장점검했고, 24일부터 호남과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적설에 대비해 발전기업-전력거래소 간 구축된 적설 상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발전기 기동실패로 인한 전력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지 중인 석탄발전기도 선제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서울 노원구 소재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를 방문, 최근 누수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열수송관 관리 상황 및 누수 사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치밀하게 실시해 하자가 확인된 설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서울에너지공사와 에너지공단에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근로자 해고통지, ‘이메일 통보’도 정당”

중앙노동위원회, 최신 판정사례 소개

최근 이메일로 근로자 해고 통지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근로자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그간의 통념이 깨졌다는 평가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신 직장 내 판정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 중노위는 한 근로자가 직장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각하 판정을 내렸다.

해당 근로자는 회사 이메일과 개인 상용 이메일로 해고 사유를 통보받은 게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3개월 인턴으로 사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회사 이메일과 개인 상용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것에 대해 서명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11월에도 구두로 해고 통보한 당일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사건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중노위는 2015년 9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근로자가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됐으면 서면과 같은 효력이 지닌다고 판정했다.

이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활용하

해고 통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라서 주목받고 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이메일 해고 통지가 가능하다는 판정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20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법률 규정을 고려하라’는 예외 조항이 빠져서다. 이전까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로서 효력이 있었는데 개정법으로 예외가 없어지면서 이메일 해고통지도 유효해졌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두뇌한국21 사업’으로 지역대학원 지원

교육부, 사업 수정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가 대학원 혁신지원사업비를 지역에 집중 투자해 지역대학원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분야 핵심 정책방향의 흐름이 주목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4일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에 따른 2023년 사업 규모 확대, 지원 방향 등이 반영됐다.

먼저 대학원 차원의 제도혁신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지역대학원 4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

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확보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증액분 278억원을 지역대학원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따라 지역대학원에 대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지원 규모와 지원액이 수도권 대학원 이상 수준으로 크게 확충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원혁신지원비를 활용해 예비대학원생(학부 3학년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주니어 비케이(BK)’ 사업이 신설·운영된다. 지역대학원을 포함한 각 대학원은 주니어 비케이(BK) 사업을 통해 우수 학부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타 지역 및 국외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등 학문 후속세대 육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하은 기자 godhe@